

## 국가전략특구를 활용한 규제개혁 가속화

- 일본정부는 국가전략특구를 활용, 규제완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, 2015년에 집중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
- 특히, 암반규제로 불리는 농업, 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전략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의지

### □ 규제완화를 위해 특구법안 개정

- 일본정부는 '15.1.27일 제11차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를 개최, 정기국회에 제출할 국가전략특구법 개정안과 향후 검토가 필요한 13개 규제완화 항목에 대해 논의
  - 2014년 가을, 임시국회에 제출된 국가전략특구법안이 중의원 해산으로 폐기됨에 따라 아베 총리는 기존 법안에 규제완화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제출할 예정
  - 농업과 의료 등 암반규제로 불리는 분야의 개혁을 얼마나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
- 국가전략특구 제2탄으로 「지방창생특구」를 설치하고, 3월까지 대상 지역을 지정하기로 결정
  - 지방창생특구 지정 기준은 「근(近)미래기술 실증」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조건
  - 원격의료, 원격교육, 자동비행, 자동주행 등 근(近)미래기술의 신상품·서비스 실증을 위해 특구를 활용, 산간지역·외딴섬 지역의 대담한 규제개혁을 단행

### □ 규제완화 검토 내용

- 농업 분야는 현재 기업의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25%로 한정되어 있는 규제를 50% 이상으로 완화
  - 농업인들이 기업의 농지 보유 확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성이나 여당에서 반발이 예상, 이에 대해 이시바 지방창생담당대신은 「규제개혁을 하지 못하면 각 부처는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」고 강조
- \* '15.2.9일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(JA전중)는 정부·자민당 개혁방안에 합의, 지역 농협에 대한 감사·지도권을 폐지하고 '19.3월말까지 일반사단법인으로 전환기로 합의

\*\* 1954년 시작된 JA전중 제도는 60년 만에 지역 농협의 통제에서 자립, 경쟁 축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로 전환

- 소유자가 불명한 농지를 수용하기 쉽도록 제도를 개선하고, 어업권 면허를 어협과 기업이 대등하게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

○ 의료·복지 분야는 의사 면허를 가진 외국인이 특구 내에서 일본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, 외국인 미용사들이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

- iPS세포를 이용하여 유사 장기에 혈액을 사용한 실험 실험 제도나 도시공원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은 일본정부와 각 부처 간에 합의가 되어 조기에 규제 완화가 가능해 짐

○ 관광·서비스분야는 모범 택시사업자에게 「택시 감차법」\* 적용 대상에서 제외 시켜, 감차나 요금 등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혁안을 제시

\* 택시 업계의 과당경쟁을 시정하고 운전기사 임금 향상을 위해 택시 사업자에게 강제적으로 요금 인상과 차량 감차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  
(’14.1월 시행)

- 창업 축진을 위해 벤처기업이 서비스 분야에서 지자체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

○ 2014년에 개정된 「일본재흥전략(성장전략)」에서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은 ‘16년 3월까지 암반규제 개혁을 마무리할 방침

-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법안은 혼합진료, 노동시간 규제의 재검토, 농업위원회의 개혁·농업생산법인 요건 재검토·농업협동조합 제도 재검토 등임

#### <국가전략특구 추가 규제완화 내용>

농림수산업
○농업생산법인에 기업이 50% 이상 출자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
○소유권자가 불명한 농지의 수용 촉진
○임지개발 허가권을 시읍면으로 이관
○특정구역 어업권의 면허를 어협과 기업이 대등하게 취득토록 개정
○수의사 양성 대학·학부 신설 해금
의료·복지
○의사 부족·지역에서 외국인 의사의 진료 해금 (일본인 환자 포함)
○의료보험·간병보험의 주소지 특례 대상 확대
○왕진 료·재택의료의 탄력화
◎iPS세포에서 제조하는 실험용 세포 등에 대한 혈액 사용 해금
◎수도권의 공원을 이용한 어린이집 설치 해금
관광·서비스
○특구 내 모범 사업자에 대한 「택시 감차법」(감차·요금 규제)의 적용 제외
○지역 한정 미용사의 창설 및 외국인 미용사의 해금
창업 지원
◎지자체의 수의 계약 요건을 완화하여 벤처기업 우대

- ◎ 정기국회에 개정법을 제출
- 향후 검토 사항

## □ 시사점

- 과거 정권에서 추진했던 특구 정책은 지자체에서 요구한 규제완화 내용을 정부가 검토했지만, 아베 정권의 국가전략특구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
  - 개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던 농업 분야도 이번에 JA전중을 사실상 해체하는 등 강력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음
  - 아베 정부는 지난 2년간 지지부진했던 성장전략을 ‘16.3월까지 마무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’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주목
- 외국인 의사의 진료 및 외국인 미용사의 해금이 결정되면 한국인 의사·미용사가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
  - 우리나라도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지만, 내수 진작을 위해 신상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내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의 규제완화 제도를 참고할 필요

## &lt;참고자료&gt;

닛케이신문(2015.1.28, 2.7/8), 일본정부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 보도자료(2015.1.28)